

#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

2026. 6. 30(화) 14:00~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 Program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개선 세미나



## ■ 주요 내용 및 진행 순서

구분	시간	순서	내용
개회	14:00~ 14:25	개회사	- 국회입법조사처장 이관후
		환영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박성호
		축사	- 국회의장 조정식 - 국회의원 이정문 - 국회의원 조인철 - 국회의원 김재섭

### 사진 촬영(5분)

발제	14:30~ 14:55	발제1 (10분)	<b>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평가 현황</b>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2 (15분)	<b>규제 입법의 현황과 과제</b>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라운드테이블)	15:00~ 16:00	토론 (60분)	<b>디지털 산업 발전을 고려한 입법 절차 개선 및 사전 정책 검토 체계 도입 방향 논의</b> - 황용석 교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좌장) - 황성기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황창근 교수 (홍익대 법과대학) - 김도승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임정욱 공동대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최은진 입법조사관보 (국회입법조사처)

### 정리 및 폐회



# Contents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개선 세미나



발제1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평가 현황

1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2

규제 입법의 현황과 과제

7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이관후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세미나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마련해 주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이정문 의원님, 조인철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산업은 이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플랫폼, 인공지능, 데이터, 온라인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혁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입법의 속도만큼 내용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산업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서비스 모델이 유동적이며, 국내외 시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입법 대응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규제부터 도입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 분야일수록 입법 전 단계에서 규제의 필요성, 대안의 적절성, 비용과 편익, 집행 가능성,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디지털 산업 관련 규제 입법의 현황을 진단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입법과정상 쟁점을 점검하며, 향후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는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평가의 현황, 규제 입법의 구조적 문제, 디지털 신산업에 적합한 입법평가 체계와 정책 대안 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입법 전 단계의 사전 정책 검토 체계, 입법영향평가,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입법 가이드라인 등은 앞으로 국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조사·분석 기관으로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도 국민 보호와 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토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단순히 디지털 산업 규제의 찬반을 넘어, 더 나은 입법 절차와 더 높은 입법 품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이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와 제도 개선에 소중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장 이 관 후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성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디지털 산업의 입법 품질 혁신을 위해 뜻을 모아 오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주신 이정문 의원님, 조인철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함께 주최해 주신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실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디지털산업’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매출 1,200조 원을 돌파한 확실한 주력 산업입니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생태계는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제도적 환경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수많은 디지털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으나, 특정 이슈에 대응하는 ‘사전 규제’와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한 ‘중복 입법’은 우리 혁신 스타트업들의 동력을 꺾고 글로벌 무대에서 뛰는 기업들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엄중한 목소리입니다.

이제 디지털 규제 입법은 ‘얼마나 많이 규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스마트하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규제 일변도의 경직된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의 역동성과 글로벌 무대의 무한 경쟁 환경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 패러다임’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제 대신 민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안이 초래할 실물경제의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건강한 입법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 산업계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디지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입법의 ‘질적 혁신’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참석자 모든 분을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 성 호**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조정식입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개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정문·조인철·김재섭 의원님,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님, 그리고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디지털 입법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귀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디지털 산업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산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디지털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일은 곧 국가경쟁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속도에 비해, 의회의 입법은 특정 사안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거나, 획일적인 규제를 그대로 반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입법이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업의 혁신은 늦어지고, 글로벌경쟁력 또한 뒤처지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과 입법의 간극을 좁히고, 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도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개선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디지털 산업의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회의장 **조 정 식**



## 축사

반갑습니다. 천안병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먼저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개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기술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마주하는 입법 과제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혁신의 가능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디지털 관련 입법이 산업과 기술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는지 국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양적 성과를 넘어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 시행 이후의 효과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까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법안 발의 단계에서 글로벌 경쟁 환경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 체계를 강화하자는 제안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산업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모든 영향을 사전에 완결적으로 예측하고 검증하는 데 지나치게 무게를 둘 경우 오히려 필요한 입법의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의 충실성을 높이면서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문제의식과 정책 대안이 제도적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의 건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심사 과정에서 각 법안의 취지와 효과를 충분히 비교·검토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더 나은 입법으로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계와 산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와 노동자,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기술 개발자와 정책 집행자의 경험이 고르게 반영될 때 입법은 현장을 더욱 충실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해나 관점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한편,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열린 절차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결국 좋은 입법은 하나의 기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사전 검토의 충실성과 대응의 시급성, 다양한 대안의 제시와 심도 있는 심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정부와 국회,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서로의 현실과 한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입법 절차를 함께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더욱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회의원 **이 정 문**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조인철입니다.

오늘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개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며 힘을 모아주신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리고 이정문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발제와 토론을 위해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산업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생활을 움직이는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디지털산업 총매출은 1,261조 원을 넘어섰고, 종사자도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AI, 플랫폼, 데이터, 온라인 서비스는 이미 국민의 일상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 성장전략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산업의 혁신과 확장을 뒷받침하면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기준은 분명히 하되, 그 과정에서 기업의 도전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교하고 균형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 역시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디지털 산업의 신뢰 기반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트워크 안정화, 아동·청소년 AI 안전망 구축, 해외 AI·플랫폼 기업의 국내대리인 실효성 강화, AI 생성물 표시를 통한 투명성 보완, 다크패턴 금지 등이 그 일환입니다.

이러한 입법의 목표는 산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들고, 그 신뢰 위에서 기업이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시장도 성장하고, 혁신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디지털 산업의 빠른 변화 속에서 국회와 정부, 산업계와 전문가가 어떤 제도적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와 실증적 근거가 입법 과정에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좋은 입법은 국민을 보호하면서도 혁신의 길을 넓히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이 안심하고,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회의원 **조 인 철**

## 축 사

안녕하십니까. 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 김재섭입니다.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개선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귀한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디지털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데이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기술 혁신의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국회와 정부의 입법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의 입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 현장과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의 확대가 아니라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인 만큼 과거의 기준과 관성에 머무른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 있는 유연한 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적 상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이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가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도봉구(갑) 국회의원 **김재섭**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개선 세미나

# I

##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평가 현황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

#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평가 현황

2021-2025 5개년 평가 결과 및 시사점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배경 및 문제의식

### 디지털 전환의 가속

1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플랫폼·온라인 서비스 의존도가 사회 전반에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기존 법체계가 상정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 규제 공백과 입법 경쟁

2

플랫폼, AI, 데이터, 가상자산 등의 영역에서 규제 논의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다수의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 글로벌 규제 압박의 내재화

3

EU의 DSA·DMA·AI법 등 해외 주요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입법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맥락보다 속도가 우선시됐습니다.

이 격변기에  
쏟아진 법안들,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 위원회 소개

### 전문성

디지털산업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법학·기술경영 미디어 등)

### 독립성

외부 전문가 10인  
위원 간 사전 결과 공유 없이  
독립 평가 수행

### 지속성

5개년 연속 평가(2021년 출범 → 현재)  
매해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통한  
결과 공개

## 평가 방식

①

### 법안 모니터링

협회 내부 선별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

②

### 체크리스트 평가

25개 세부 기준  
상·중·하 3등급

③

### 독립 평가

위원별 개별 평가  
결과 사전 비공개

④

### 점수 산출

100점 환산  
산출 평균

⑤

### 결과 공표

연간 백서  
공개 발표

## 입법평가 프레임워크 : 3대 핵심 차원

### 법적 차원

체계성 및 정당성 평가  
법률 용어의 엄밀함과 헌법상  
명확성·비례성·포괄위임 금지·  
체계정당성 유지 여부 점검

### 산업 차원

산업 생태계 적합성 평가  
사업모델 혁신·기술 진화 대응력,  
글로벌 경쟁력 및 통상 마찰 여부  
평가

### 집행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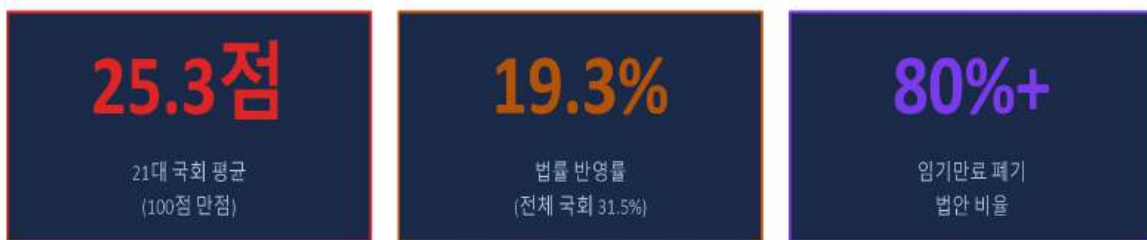
규제 운영 실효성 평가  
수범자 범위 설계·행정편의 방지,  
부처 간 중복 규제 해소,  
자율규제 연계성 평가

3대 차원 · 25개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 (2025년 전면 개편)

## 입법평가 세부 기준 : 3대 차원 12개 지표 25개 세부 항목

<b>법적 차원</b> 체계성·정당성	<b>법률 용어 적정성</b> 규제 시행 해석에 필수적인 개념들이 정의 규정에 모호함 없이 명확히 구축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b>헌법 원칙 준수성</b> 규제 내용이 명확성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며,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 없는지 판단합니다.
	<b>포괄위임 금지</b> 핵심 수범 사항이 허위 법령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백지 위임되어 권한이 오남용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b>체계정당성 유지</b>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과의 중복·충돌 여부를 감시하여 일관성을 수호합니다.
<b>산업 차원</b> 생태계 정합성	<b>산업 현실 부합성</b> 플랫폼 다면시장구독 경제 등 고도화된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외국 하지 않고 수용하는지 평가합니다.	<b>기술 진화 수용성</b>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영역에서 고정된 법조문이 기술 발전 속도에 제동을 걸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b>시장 균형 보장</b> 신규 중소 벤처기업의 진입이 원천 차단되거나 다각적 경쟁 구도가 붕괴되는 부작용이 없는지 분석합니다.	<b>글로벌 정합성</b> 역외적용 규정으로 인한 자국 기업 역차별 소지 및 국제 통상 마찰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합니다.
<b>집행 차원</b> 운영 실효성	<b>수범 대상 범위</b> 입법 취지와 직접 관련 없는 제3의 기술 영역 사업자까지 모호한 유권 해석으로 포섭되지 않도록 한정합니다.	<b>의무 부담 적정성</b> 실태조사 납발 방지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자료 제출 거부권이 충분히 제도로 보장되는지 평가합니다.
	<b>거버넌스 명확성</b> 방통위·과기장·통부·공정위 등 유관 부처의 관할 중복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조율 메커니즘을 요구합니다.	<b>자율규제 반영</b> KSO 등 민간 자율기구의 공동 가이드라인이나 업계 차치 조율 체계가 법안 도입 시 우선 검토되는지 추적합니다.

## 5년간 평가 결과



연도	대상 법안	주요 쟁점
2021	180건	과도한 규제 범위 · 산업이해 전반 미흡
2022	150건	기술이해 개선 수 · 사회영향력 약화 ↓
2023	154건	행정편의 과도 의무 급락 · 온라인플랫폼법 집중
2024	108건	21대 국회 임기 후반으로 갈 수록 전반적 품질 하락
2025	273건	AI·플랫폼 법안 급증 · 산업생태계 정합성 최저

\* 2025년부터 평가 지표 재편(3차원 25항목) 및 AI 보조 평가 20% 가중 적용으로 직접 비교에 한계 있음

## 22대 국회 첫 평가 | 3개 차원별 진단 결과 (2024.05 - 2025.05, 273건)

전체 평균

**26.1점**

세 차원 모두 저평가 – 특히 산업 차원이 가장 낮음

### 법적 차원

체계성 및 정당성

**27.7점**

100점 만점 기준

법률 용어 적정성 **31.6점**

헌법 원칙 준수성 **26.5점**

규율의 명확성·비례성 및  
법체계 정합성

### 산업 차원

산업 생태계 정합성

**24.4점**

100점 만점 기준

산업·기술 환경 정합성 **23.5점**

시장·국제 규제 정합성 **25.4점**

산업 현실 부합성·기술 진화  
수용성 글로벌 정합성

### 집행 차원

규제 운영 실효성

**26.0점**

100점 만점 기준

규제 집행 메커니즘 **28.1점**

규제 거버넌스 **24.5점**

수법 대상 적정성·규제 권한  
명확성·자율규제 현황

\* 2025년 평가지표 재편(3차원 25 항목) 및 시·보조 평가 20% 가중 적용. 21대 국회 수치와 직접 비교에 한계 있음

##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5년간의 평가가 드러낸 것은 단순한 법안의 실수가 아닙니다. 구조적 반복입니다.

### 01 사전적·일방적 규제 설계의 반복

- 시장과 산업의 자정 가능성은 배제된 채, 법적 규제만이 유일한 수단으로 반복 선택되어 옴
- 다양한 수단 검토 없이 의무·금지 조항을 먼저 꺼내드는 일관된 패턴 확인

### 02 산업·기술 현실과의 괴리, 갈수록 심화

- 발의 건수는 늘었지만 법안의 현실 반영도는 오히려 낮아짐
-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입법은 같은 프레임을 반복 적용해 옴

### 03 품질 높은 법안만 살아남는다

- 위원회 평가와 실제 법률 반영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결됨
- 낮은 품질의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

### 04 규제 피로의 누적, 전략적 기회의 상실

- 끊임없는 입법 불확실성은 투자 결정 위축과 리스크 대응 비용 증가 초래
- AI 시대 핵심 개발 동력을 갉아먹는 유무형의 손실이 누적됨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개선 세미나

# II

## 규제 입법의 현황과 과제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규제 입법의 현황과 과제

2026. 6. 30.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현황

### 기업 경제형벌 8403개...34%가 중복 처벌·제재

안경

읽어볼 수

입력 2025.11.10 17:42 수정 2025.11.11 01:26

한경협, 경제법률 전수조사

가격·생산량 정보 교환만으로도  
징역·벌금·과징금·손배 '4중 처벌'  
위반행위 92%, 법인도 함께 제재

### "AI 기본법 과잉 규제 우려..."고영향 AI' 정의 등 정비 해야"

출고 2025-09-08 11:44

세움 요약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빅데이터 기자  
+ 구독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하위 입법 보완 필요"

### 국제언론인협회 "한국 정통방법, 언론자유 침해 심각한 우려...시행 말아야"

전종휘 기자 **한겨레**

수정 2026-01-22 12:02

## 현황

### •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양적 성과주의 → 청부입법의 증가
- 감정 해소용, 여론 무마용 입법
- 과도하게 빠른 입법 vs. 필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법률
- 관할 경쟁과 각종 진흥법, 기본법의 남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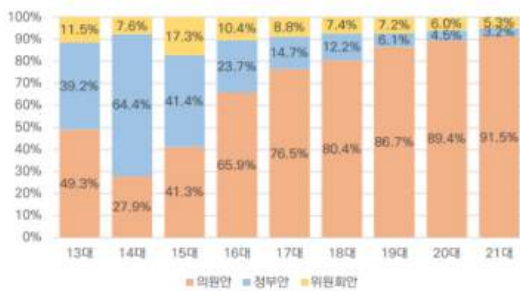
## 현황

[표 1] 제21대 국회 법안 제안 현황

구분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의원안	462	252	806	1,651	5,728	11,191	15,444	21,594	23,655
정부안	368	581	807	595	1,102	1,693	1,093	1,094	831
위원회안	108	69	338	261	659	1,029	1,285	1,453	1,372
합계	938	902	1,951	2,507	7,489	13,913	17,822	24,141	25,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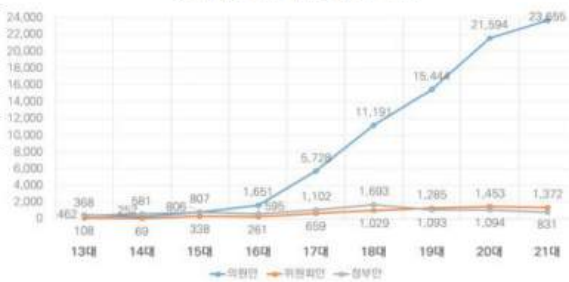
자료: 국회의원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finishBillSearch.do>>

[그림 1] 전체 법안 중 의원안·정부안·위원회안의 비율



Source: 전진영/김현아, 제21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2024. 12. 19.

[그림 2] 국회 법안 제출 추이



[그림 3] 법안제안 주체별 법안가결률 추이



## 과제

### LG, EXAONE 기반 암 치료 설계 에이전트 개발



## 국내 항암제 시장, 표적항암제 & 면역항암제가 '성장' 주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13%, 제약산업에 '2배'  
면역억제제 PD-1/L1 영역...6년간 평균 73.6% 성장

5

## 과제

### • 규제, Why?

- 사회적 해악(harm)의 예방 & 제거

### • 규제, How?

- 규제실증주의: 헌법상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의 구현

- Ex. 의료: 정밀한 진단 → (통계적/임상적)유효성 & 안전성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료기술이 임상적 유용성, 경제성(비용효과성) 등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적용
- 수단의 적합성: 진단의 정밀성(사회적 해악의 존부 및 정도에 대한 정밀한 진단) & 규제의 유효성 → (표적치료와 같은) 정확한 대응
- 침해의 최소화성: 규제의 안전성 → 부작용 방지
- 법익의 균형성: 규제의 비용효과성 판단 → Better Regulation 추구

-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의 실효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재, 왜 입법은 그러하지 못하는가?

6

## 과제

### • 이 시점에서 규제의 합리화가 강조되는 이유

- 디지털 경제 →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 AI 대전환
  - 다면시장, 네트워크 효과, 규모 & 범위의 경제, 전환비용 & 고착효과, 데이터화 & 알고리즘
  - 활용 대상으로서의 데이터 vs. 보호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
  - 글로벌 시장 & 급격한 기술 발전 → 과잉규제, 과소규제 모두 문제
- 규제의 어려움
  - 디지털 시장은 너무 다양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모두에 공통적인 일반규칙 수립/적용 곤란
  - 디지털 시장에서의 지배력 → 시장 경쟁만으로 기울어진 시장 및 승자 독식에 결합된 문제 해결 곤란
  - 위험(Gefahr)이 아닌 리스크(개연성이 아닌 가능성) 기반 규제 →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회복불가능한 사회적 손해 발생 가능
  - 한국적 특수성: 국내기업/산업 진흥/육성 & 남용/독점 방지 間 균형

## 과제

- 규제 위험 → 시장 실패보다 무서운 규제 실패 가능성
  - 전통적인 포지티브 시스템 + 규제친화적인 정치/사회/문화적 토양 → 포괄적/일반적 규제에 흐름 가능성
  - 규제기관의 중첩 & 부처간 관할 경쟁
  -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 과제

### • 합리적 규제, 실효적인 규제를 위한 전제

- 규제 도입/설계/순응/집행 → 사회문화적 배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
- 교육(가정, 학교), 사회문화적 변화 → 시민사회와 같이 가지 않으면 규제는 실효성이 없음
  - 법률만능주의의 배경
  - 모든 것을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下之下策 & 정책결정자의 무책임
- 규제자의 역량
  - 실증분석 능력의 부족
  - 규제비용에 대한 협소한 이해: 규제비용은 사회 전체의 compliance 비용 포함
  - 의회의 역량 강화 절실
- 합리적 거버넌스 체계
  - 부처간 갈등 조정/통합
  - 파편화된 규제 지양 → 종합적 접근

9

## 과제

### •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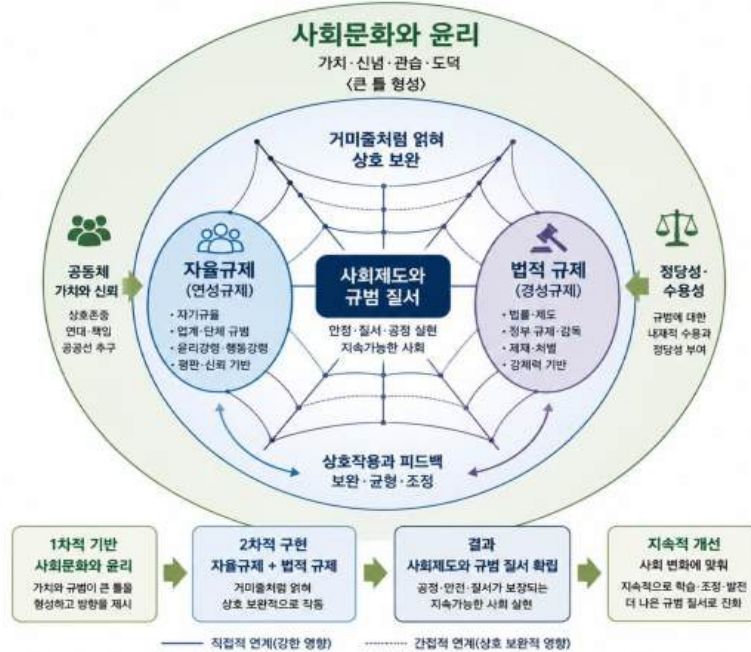
- 시장 분석 → 규제 전략 수립
  - 규제 대상의 특성 파악 & 규제 근거(시장 실패 등) 확인 → 우선순위 선별
  - 실리적/실용적 Approach
    - ❖ 국내 규제는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선별해서 시도 → 국제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분야 확인 後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 노력
    - ❖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실효성 → 해외 규제 동향을 후행하는 것이 현명(통상 마찰 방지)
    - ❖ 필요한 경우, 특정 기업의 cherry picking, 과도한 이익 창출은 조세 정책으로 해결
    - ❖ 경쟁법 & 전문규제 간 갈등 조정/통합

10

## 과제

- 규제 원칙 도출
  - 윤리원칙 활용
  - 공동체의 common sense에 기반한 정당한 규제 목표(원칙) 수립
- 규제 방식 선택
  - 규제 네트워크: 사회문화 & 윤리(ex. 리터러시, 교육) + 자율규제 + 경성규제
    - ❖자율규제 활용: 전문성, 이행가능성, 실효성, 신속성 확보 → 다만, 모든 분야에서 유효한 것은 아님
    - ❖자발적 자율규제 vs. 자율형 공동규제 vs. 장식적 자율규제
  - 리스크 기반 규제 & 단계별/맞춤형 규제
  - 사전규제, 사후규제 / 전문규제, 일반경쟁규제
- 규제 관할
  - 부처별 중복규제 방지
  - 통합 법전화
  - 필요한 경우, HLEG(High Level Expert Group) 등 활용

## 과제



## 과제



13

## 과제



14

## 과제

### • 중복규제(이중규제)의 해소

#### - 필요성

- 이념적 측면: 법질서의 통일성, 행정의 대외적 단일성 → 수범자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행정 → 국민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 헌법적 측면: 이중처벌금지, 일사부재리, 적법절차원칙, 비례원칙
  - ❖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원칙: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 적용(헌재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 정책적 측면: 규제완화, 시장 활성화, 정부실패 방지, 국민의 편익 증진
  - ❖ 임의조사인 서면실태조사도 수범자에게는 부담

15

## 과제

#### - 원칙

- 해결 방안이 있어 법이론이 전부는 아니며, 각 나라마다 역사, 사회문화, 경험 등에 따른 차이 존재 → 궁극적으로는 누가 더 잘할 것인가가 중요
  - ❖ ex. 프랑스의 행정법원(juge administratif) vs. 사법법원(juge judiciaire)
  - ❖ ex. 일본의 경찰 vs. 검찰
  - ❖ ex. 미국의 법원을 통한 규제: 보통법의 강한 전통 + 연방권한 확대에 대한 경계 + 사적 집행의 활성화
- 경쟁당국과 전문규제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대해서는 일률적 판단 곤란: 각국의 시장구조, 기술 발전, 시장자유화 정도 등 고려
- 관할 배분 원칙: 행정의 실효성 확보 & 시민의 기본권 보장
  - ❖ 규제의 효과적·효율적 수행 →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 ❖ 수범자인 시민 관점에서의 편익: 방어권, 대심구조, 준사법적 절차 등

16

## 과제

### - 해소방안

- 규제완화 or 신중한 규제 도입 → 무분별한 관할 선점 경쟁 자제
- 관련 법령의 합리적 해석 & 조사/제재 합리화
  - ❖ 특별법우선원칙의 명확한 적용
  - ❖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공동조사) → 수범자는 조사의 중복만으로도 어려움
  - ❖ 동일/유사 제재의 조정/합리화
- 입법을 통한 규제관할의 명확화

## Q&A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